

데스크사자

기는 광주, 나는 부천



박진현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지난해 여름, 융복합 문화시설인 '부천 아트벙커 B39'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명불허전이었다. '2018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이라는 이력이 그저 괜한 것이 아니었다. 과거 소각장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만큼 '화사한 부활'이었다. 이날 특히 시선을 끌었던 건 건물 외벽에 새겨진 '유네스코 문화창의도시'라는 동판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알고 있는' 부천은 문화과는 거리가 먼(?) 도시였기 때문이다. 1980년대 양귀자의 소설 '월미동 사람들'의 무대이긴 하나 '문학 창의도시'라는 간판을 달기에는 문학적 토대가 그다지 단단하지 않다고 여긴 것이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라는 명칭은 문학·음악·공예·디자인·영화·미디어아트·음식 등 7개 분야에서 뛰어난 창의성을 동력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도시에 부여된다. 현재 80개국 246개 도시가 가입된 유네스코 창의도시 협력체(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UCCN)에는 광주(미디어아트)를 비롯해 서울(디자인), 부천(문학), 부산(영화) 등 국내 10개 도시가 소속돼 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되면 해당 분야의

도시 간 교류는 물론 UCCN의 네트워크를 매개로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국제 무대에서 통하는 '유네스코'라는 로고는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부가가치가 높은 자산이다. '유럽문화수도'라는 브랜드를 앞세워 세계적인 문화도시가 된 영국 리버풀처럼 창의도시로 지정되면 문화도시는 물론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 부천이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눈독을 들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유네스코'라는 로고

사실 부천은 1997년 부천 국제판타스틱 영화제가 탄생하기 전에는 공업도시의 이미지가 강했다. 그러나 이를 벗어나기 위해 고심 끝에 필벽 여사관련 '문화적 카드'를 추켜들었다. 노벨문학 수상자로 유명한 필벽 여사가 6·25 전쟁 당시 부천 삼곡본동에서 혼혈 아동을 보살핀 '인연'에 착안해 '필벽기념관'을 건립하고 이와 관련 스토리텔링에도 공을 들인 것. 여기에 '논개'의 변영로 시인, 부천에 잠시 적을 두었던 정지용 시인의 역사적 단편들을 실로 엮어 유네스코의 문을 두드렸고, 2017년 문학 창의도시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부천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문학도시로서의 답대란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시 산하에 '문학창의도시 부천'을 주도적으로 이끌 전담 사무국을 신설했다. 또한 거의 모든 문화시설에 유네스코 로고를 내걸었는가 하면 전용 홈페이지를 오픈해 UCCN과의 교류 활동에도 적극 나섰다. 실제로 UCCN의 홈페이지에서 부천을 클릭하면 사무국 이외에 한 국만화영상진흥원과 부천시청이 링크돼 있어 부천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말하자면 부천을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 플랫폼으로 특특히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21년 개최되는 UCCN총회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는 광주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지정된 지 6주년이 되는 해다. 광주시는 국내 유일의 미디어아트 도시라는 영예를 거머쥐 이후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사업단을 주축으로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핵심 시설인 에이엠티(AMT: Art and Media Technology) 착공, 홀로그램 극장 오픈, 유네스코 창의벨트 추진 등 인프라 조성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해 6월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연례회의에 전 광주시 문화체육관광과 미디어사업단장 등 4명이 참석했으며 여기에 '부의장 도시'로 선정되면서 미디어아트 도시로 한 단계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무늬만 '창의도시'?

잘 알다시피 광주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동아시아문화도시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지녀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래서일까. 글로벌 기구인 UCCN의 가치를 간과한 채 도식적으로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는 탓에 창의도시다운 면모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제야 무리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일 터. 이제부터라도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효과를 겨냥한 비전과 로드맵을 촘촘히 짜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첫 단추는 창의도시를 '기획'하고 광주를 브랜딩하는 컨트론타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안타까운 대목이다. 가령 UCCN 홈페이지에서 담당자 이메일 주소 외에 광주와 관련된 그 어떤 정보도 찾을 수 없다. 무늬만 창의도시인 광주의 현주소다. 그중에서도 특히 아쉬운 것은 전문성과 권한을 갖춘 전담 조직의 부재다. 다른 창의도시들이 독립적인 기구나 팀을 구성해 주요 사업이나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달리 광주시는 광주문화재단에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이원화 체제다. 미디어아트 관련 업무의 경우 광주시 문화도시정책관 주무관 1명이 맡고 있는데 1~2년마다 담당자가 바뀌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단행된 시 정기 인사에서 시청 공무원 2명과 미디어사업단장이 이탈리아 유네스코 연례회의의 출장을 다녀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타 부서로 이동한 것이 그 좋은 예다.

무늬만 '창의도시'?

잘 알다시피 광주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동아시아문화도시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지녀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래서일까. 글로벌 기구인 UCCN의 가치를 간과한 채 도식적으로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는 탓에 창의도시다운 면모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제야 무리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일 터. 이제부터라도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효과를 겨냥한 비전과 로드맵을 촘촘히 짜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첫 단추는 창의도시를 '기획'하고 광주를 브랜딩하는 컨트론타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은폐칼럼

코로나19 감염증 그 후



심상돈
동아병원 원장

지난 두 달 동안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재난 경보 문자. 4월 초까지 연장된 학교와 유치원의 방학. '선량한 시민'의 표식이 되어버린 마스크. 반짝이는 아이티어라고 전 세계가 지목한 코로나 확진 검사를 위한 이동 차량 검사소. 재난 보도 준칙을 무시한 취재와 보도로 확산된 '두려움'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기침 예절과 구체

적인 손 씻기 방법에 대한 공익 광고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과거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의 유행에 대한 기억이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 조금은 덜하지만 그 확산 정도에 날마다 놀라고 있다. 끝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뒤통스만막이 날 위기이다.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 단지 전염 속도를 조절하여 전문 치료 시설에서 감염병 환자 치료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며 사회적 자연 치유를 기다릴 뿐이다. 모든 병원은 메르스 감염증 때처럼 병원이 감염병 전파의 큰 매개체가 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코로나 감염증이 아닌 '보통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병원에 출입하는 사람의 수를 줄이기 위해 출입구를 통제하고 입원 환자 1인당 보호자를 한 명으로 제한했다. 모든 내원

객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고 다른 공간, 다른 지역의 감염원과 접촉 여부를 일일이 확인한다. 초기에는 쉽지 않았으나 한 달이 지난 지금은 다들 잘 적응하고 협조도 그런대로 잘 이루어진다. 모든 직원이 애를 쓴 덕택이지만 그 중심에는 감염 관리실이 있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는 감염 관리실이 필수 요건 중 하나이다. 시간적·공간적 감염 감시를 통해 병원에서 발생하는 감염으로부터 환자와 직원 그리고 방문객 모두를 보호하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물론 손 소독에 대한 홍보와 교육은 기본이다. 감염 관리실도 초기에는 추가적인 인력과 비용 문제가 쉽지는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정착되면서 새로운 '의료 문화'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증 유행 초기에는 '낯설었지만' 지금은 일상이 되어 버린 손 씻기와 손 소독, 다른 사람을 배

려하는 기침 예절은 지금의 감염병이 사라진 뒤에도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화'로 유지되기를 바란다. 코로나19 감염병 이후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병원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학교, 회사, 종교 시설에는 감염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을 두어 손 씻기와 주변 환경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인 감염 관리를 하면 또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병에 좀 더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병원 내 감염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음식과 물을 매개체로 하는 전염병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는데 가장 크게 이바지한 것이 항생제의 개발이 아니고 손 씻기를 비롯한 공중체 위생에 대한 노력이다. 개인적인 노력을 사회적인 결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 필요하리라는 판단이다.

기고

바람직한 종교관



김평호
전 광주시교육청 학생교육원장

종교는 인류의 역사에서 매우 값진 문화의 산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은 나름대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동 지방의 무슬림교는 신정 국가를 지향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헌법 제20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중국 전역을 강타하고 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가던 초기만 하더라도 한국의 대처 방안과 의료 시스템 그리고 그 기술은 세계적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질만

했다. 그러던 차에 신천지교회 집단 감염은 온 나라를 뒤흔들어 놓은가 하면 지난 17일 현재 확진을 받은 감염자는 8300여 명에 달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은 물론 개인·회사·국가의 경제에 예상치 못하는 손해를 끼치고 심지어 외교 마찰까지도 초래하게 되었다. 어찌 이뿐이라. 지난 1992년 10월 28일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이장림 목사의 흑세무민의 휴거론, 세월호 사건으로 자기 교파만 구원을 받는다고 역설했던 유병언의 구원과 기독교 침례교회 등 이단들은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하였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개연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 것은 성경의 직유와 은유, 비유, 과장 등의 표현을 각자가 아전인수로 해석하여 하나의 진리를 백여 개가 넘는 종파들이 서로 달리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이러한 현실을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방치해도 좋을 것인가. 인터넷

을 검색하여 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과반수가 종교인이라고 하니 그 영향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물론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이보다 더 막강한 집단은 없을 것이며 이번 신천지 사건이 이를 입증하였다. 따라서 필자의 생각은 이번 기회에 우선 각 종교와 종파 간 자정 운동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신도들은 바람직한 종교관을 확립하여 흑세무민의 도에 빠져들지 않게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요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바람직한 종교관을 확립할 것이며 각 종교단체를 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필자의 생각으로는 먼저 정치력, 행정력, 교육력은 물론 언론까지도 그 역량을 함께 기울여서 자체의 정화 운동의 바람을 일으켜야 하고, 국민들이 종교를 선택할 때 그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교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교의

개념과 가치를 모든 국민들이 공유하여야 할 것이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종교란 신이나 절대자를 일정한 양식 아래 그것을 믿고 숭배하고 받들어서 편안과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신 문화의 한 체계라고 되어있다. 이러한 전제 아래서 볼 때 우리나라가 공인하고 있는 7개 종단이 지향하는 유교의 인(仁), 불교의 자비(慈悲), 천주교의 생명(生命), 기독교의 사랑, 원불교의 은혜(恩惠), 천도교의 성(誠)·경(敬)·신(信), 민족 종교의 개벽사상(開闢思想)은 그 정신이 내면화될 때 행법이나 기타 타율적 규범으로 국가나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고지선의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각계각층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국민들의 바람직한 종교관을 확립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社說

민주당의 허술한 공천 관리 도마에 올랐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경선에서 승리한 이석형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향후 선거 구도에 파장이 예상된다. 광주지검은 그제 오후 광주 광산구 이석형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및 후원회 사무실, 선거캠프 관계자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공식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4월 2일 이후에는 현행법이 아닌 경우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날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경우에 따라 이 예비후보의 자택 등도 추가로 압수수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광주지선거관리위원회는 이석형 예비후보와 선거사무 관계자 등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시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예비후보 등은 지난 2월부터 3월초까지 자신의 휴대전화 및 후원회 사무실에 설치한 유선전화를 이용해 다수의 권리당원과 선거구민에게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민주당 경선에서 이 예비후보의 지

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에 민주당의 허술한 공천 관리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재심위원회가 10여 일 전 '불법 경선'을 이유로 재심 신청을 한 상대 후보의 의견을 기각하고 이 예비후보를 당 후보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재심위원회는 타 지역에서 선관위의 검찰 고발이 이뤄진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했지만 동일 시안으로 보이는 광산갑의 이 예비후보에게는 후보 자격을 부여하면서, 재심 기준이 오락가락하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사실은 곧바로 중앙당에 보고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민주당 중앙당의 후속 조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광산갑 문제를 다시 다룬다고 하는데, 뒷받침 광주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시민들이 지지할 것이라는 오만한 자세를 버리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자칫 당선 무효형이 예상되는 후보를 총선에 내보내는 조유의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

개학 연기 초중고 세부 방역 대책 마련해야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일이 다음 달 6일로 2주일 더 연기됐다. 밀집도가 높은 학교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할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부가 어제 세 번째 개학 연기(휴업 명령)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교육부는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에 따른 학교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사 일정과 방역 관리 지침도 내놓았다.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개학 연기 4주차 이후의 휴업 일수인 열흘을 법정 수업 일수(초중고 190일, 유치원 180일)에서 감축하라고 권고했다. 또 개학 연기 기간에는 원격 학습을 운영하도록 했으며, 학교 방역을 위해 정부 추정 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2543억 원을 긴급 돌봄 지원과 방역 물품 준비, 온라인 학습 운영에 활용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하

기로 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4차 개학 연기'를 하거나 역으로 3월 말에 다시 개학을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열어 두었다. 하지만 감염병 전문가들은 개학을 무기한 미룰 수는 없는 만큼 이제는 개학을 전제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코로나 특성상 장기전이 불가피하므로 이번 개학 연기 기간에 학교 방역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시도와 교육청은 긴밀히 협력해 각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와 마스크, 손 세정제, 체온계 등 필수 방역 물품을 신속히 확보하고 환자 발생에 대비 소독 및 격리 등에 대한 상세한 방역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학생과 교사들에 대한 위생 교육을 강화해 개학 이후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p>당원(黨員)은 정당에 소속된 사람, 즉 정당의 구성원이다. 정당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인 당원은 크게 진성당원(眞性黨員)과 일반당원으로 분류된다. 진성당원은 당비를 납부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당원을 말한다. 정의당 등 진보정당에서는 진성당원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관리당원으로, 미래통합당은 책임당원이라는 이름으로 달리 부른다. 각 정당의 진성당원은 당직 선거 및 공직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에서 후보의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구실을 한다. 이 때문에 선거 때만 되면 출마 예정자들이 당원 모집에 열안이 되고, 불·탈방법이 이뤄지기도 한다. 경선을 앞두고서는 당원 명부 유출 문제가 항상 선거판이 시끄럽기도 했다.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권을 갖고 있는 진성당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주·전남에서 민주당이 관리당원을 무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순천·광양</p>	<p>·곡성·구례간 선거구는 민주당이 특정 후보 전략공천함으로써 관리당원들의 경선 투표권을 앗아갔다. 뒤늦은 선거구 획정으로 순천·광양·곡성·구례를 선거구에 편입되면서 순천 해룡면의 관리당원들도 경선에 참여할 권리를 잃었다. 광주 광산은 관리당원도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권을 잃었다. 애초 경선에는 참여했지만 경선 과정에서 '불법 관리당원 이용' 문제가 불거져 관리당원을 배제한 재경선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의지와 한 선거권을 갖는다. 이</p> <p style="text-align: center;">관리당원</p> <p>는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도 명시돼 있다. 따라서 진성당원은 경선에서 후보의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구실을 한다. 이 때문에 선거 때만 되면 출마 예정자들이 당원 모집에 열안이 되고, 불·탈방법이 이뤄지기도 한다. 경선을 앞두고서는 당원 명부 유출 문제가 항상 선거판이 시끄럽기도 했다.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권을 갖고 있는 진성당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주·전남에서 민주당이 관리당원을 무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순천·광양</p> <p>상관없이 명부 유출됐다는 이유로 사실상 권리를 박탈당한 셈이다. 당원은 정당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민주당은 다른 지역에 비해 광주·전남 지역에서 견고한 지지세를 갖고 있다. 그만큼 당원들의 지지와 역할이 크다. 한데 4년 전 제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광주·전남에서 국민의 당에 참패했다. 지역에서의 꾸준한 '일당 독점'이 오만함을 불러왔고, 결국 당원 '탈당 러시'와 함께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당할 것. 민주당의 오만이 계속된다면 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최원철 정치부 부장 cki@</p>
<p>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p>	